‘원내’ 양부남·‘원외’ 강위원, 지방선거 공천권 놓고 한판승부

뉴스 초점 -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같은 날 후보 등록 ‘세몰이’…현역 프리미엄이냐 당원 중심이냐
8월 2~4일 투표, 대의원·권리당원 비율 1대9 ‘당심 향방’ 관심
강위원, 과거 전력 논란으로 총선 출마 포기 … 후보 검증 ‘주목’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가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불붙고 있다.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양부남(서구을)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이끄는 강위원 상임대표 간 ‘한판 승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의 경우 재선의 주철현(여수 갑) 의원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면서 조용한 반면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한 뒤 8월4일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오는 8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ARS 투표와 8월4일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를 9대1 비율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투표 결과는 8월4일 열리는 정기 전국 당원대회 광주시당 대회에서 공개된다.

광주지역 민주당 대의원은 800여명이며 권리당원은 오는 25~26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총선 전인 지난 2월 선거인 명부 기준 권리당원이 12만여명이었지만 이후 탈당자가 많아 최종 권리당원 수를 1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시·구의원이 총출동해 권리당원을 포섭하고 있는 만큼 지지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 ‘당원 중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위원 상임대표의 약진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원외 인사인 고남석 후보가 51.89%를 받으며 3선 국회의원인 맹성규 후보(48.11%)를 3.78%p로 꺾고 당선됐다.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이 2대8이었지만 광주는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율이 1대9로 반영된 상태다.

민주당이 당초 각각 50%씩 반영하던 득표율에서 ‘당원 중심’을 주창하며 경선 룰을 대폭 바꾸면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원외 인사의 ‘선방’도 관심사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양부남 의원과 강위원 상임대표는 이날 후보 등록을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부남 후보

강위원 후보

양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어려운 정치·민생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길”이라며 “정권 교체의 교두보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 중심 시당 운영 ▲8개 광주 지역위원회 재정·인력 지원 ▲가칭 ‘광주정치 지도자 학교’ 설립 ▲지역 밀착형 ‘정책 연구원’ 설립으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광주 국회의원과의 집단 운영 체제 등을 시당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상임대표도 같은 시간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비전 선포식과 100인 공동 선대위 출범식을 열며 시당위원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강 상임대표는 “4기 민주정부로 정권 교체를 위한 ‘집권의 견인차’ 역할 위해 출마했다“며 “개인의 당선이 아니라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뛰어달라” 고 호소했다. 그는 ▲당원·시민 등으로 공론화 위원회 구성 후 공천안 마련 ▲자치구별 당원 소통단 꾸려 당 활동 홍보와 민원 접수 ▲광주 권리당원 20만명으로 증원 등을 약속했다.

시당 위원장 선거는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머쥔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 상임대표의 후보 검증 여부도 주목된다.

양부남 의원의 경우 총선 당시 후보자 검증을 통과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강 상임대표는 제22대 총선에서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했던 그는 과거 전력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후보자 검증 신청을 철회하고 출마를 접은 바 있다. 다만, 시당위원장 선거는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SINCE 1952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당협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1차 과반 승리” vs 나경원·원희룡·윤상현 “결선 간다”

국힘, 전대 투표결과 오늘 발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2일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각각 승리를 자신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후보 측 정광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3·8 전당대회보다 낮은 투표율을 두고 “워낙 처음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 ‘언더독’(열세 후보)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 대변인은 나 후보를 향한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폭로’가 “득표율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 분은 많지 않다”면서도 “1차 과반을 막을 정도의 악재가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1차 과반 승리’를 예상했다.

나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진 것 같다”며 “‘어대한’이 아니고, ‘그대나’(그래도 대표는 나경원)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나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기간 중 안 좋은 모습들에 한 후보의 중·약성 지지자들이 물음표를 찍어 투표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2차 간다”고 결선 투표를 확신했다.

윤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결선투표 여부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한 후보가 1차 50%를 넘지 못하면 결국 후보간 연대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당권 레이스 막판 변수로 떠오른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갔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폭로를 두고 “우리 당원들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윤 후보는 “자해성 폭로가 돼서 어떤 팀 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 측 정 대변인은 “공소 취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기 어려웠다”고 방어했다.

당권 주자들은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마감되는 이날까지 영남과 수도권을 돌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84만1614명) 중에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도부 선출에 20%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 중이다. 투표 결과를 합산해 23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한다. 당권주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국힘 42.1%·민주 33.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약 3개월 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5%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오른 수치다. 4·10 총선 이후 20% 후반~30% 초반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 중반에 진입한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2%p 하락한 61.6%로 조사됐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더불어민주당은 33.2%를 기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 정당 1.3%였다. 무당층은 7.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0%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